

## 중국의 재정운영 현황과 조세제도 개혁

2012년 제1회 한중 경제포럼

1. 주 제 : 중국 재정운영 현황과 조세제도 개혁의 주요 내용
2. 일 시 : 2012. 2. 23 (목) 16:00~18:00
3. 발표자 : 중국사회과학원 재경전략연구원 양즈용(杨志勇)

### 1. 중국 재정운영 현황

□ 2011년의 전국 공공재정 수입 현황

- 1~12월 전국 누적 재정수입은 전년대비 2조 639억 위안 증가한 10조 3,740억 위안 달성(24.8% 증가)
- 그중 중앙정부 재정수입은 전년대비 8,818억 위안 증가한 5조 1,306억 위안(20.8% 증가), 지방정부 수입은 전년대비 1조 1,821억 위안 증가한 5조 2,434억 위안(29.1% 증가) 달성함.

□ 공공재정 지출 현황

- 1~12월 전국 누적 재정지출은 전년대비 1조 9,056억 위안 증가한 10조 8,930억 위안(21.2% 증가)

달성함.

- 중앙재정 지출은 5조 6,414억 위안에 달함. 그중 중앙정부 지출이 전년대비 525억 위안 증가한 1조 6,514억 위안(3.3% 증가)을 달성하고 지방조세반환과 이전지출이 전년대비 7,559억 위안 증가한 3조 9,900억 위안(23.4% 증가)에 달함.
- 지방재정용 지방정부 수입과 중앙정부 조세반환 및 이전지출이 전년대비 1조 8,531억 위안 증가한 9조 2,416억 위안(25.1% 증가)에 달함.

□ 5,190억 위안의 재정 적자 기록

□ 지방채: 2010년 말까지, 중국 지방정부(성시현급 지방정부) 채무 잔액은 10조 7,174억 9100만 위안에 달함.

- 국가회계국에 의하면, 2010년 말까지 성시현 3개급 지방정부가 상환책임을 가진 채무비중, 즉 상환책임을 가진 채무 잔액 중 지방정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52.25%임.
- 지방정부가 담보책임을 가진 채무를 정부에서 상환하는 채무로 계산할 경우, 채무비중은 70.45%로 증가함.
- 그 외 2010년 담보책임을 가지거나 채무와 구제책임을 가진 기타 관련 채무의 연체율은 각각 2.23%와 1.28%임.
- 일부 지방과 산업에도 채무규모와 부담이 비교적 커 리스크 우려가 있지만, 체계적이거나 전반적인 리스크를 형성하지는 않았음.
- 중앙국채 잔액은 7조 7,708억 3500만 위안(2011년 연말 예산액)임.

□ 세계경제 환경에서 본 중국 채무 리스크 통제 가능함.

□ 재정운영이 직면한 도전

- 외부요인으로 유럽채무 위기, 미국, 일본의 경기침체를 들 수 있으며, 내부요인으로는 경제성장, 물가 변화, 취업, 국제수지와 외환보유 등임.
- 2012년에 적극적/확장적인 재정정책을 계속하여 실시함에 따라 재정 지출증가와 구조성 감세가 불가피함.
- 현재 중국 정부는 재정정책과 조세개혁 모두 중시하고 있음.

## 2. 조세제도 개혁

### 가. 재정정책과 구조성 감세

□ 조세제도 구조조정 문제를 제시하는 이유는 크게 3가지 임.

- △ 중국의 높은 물가, △ 사치품에 대한 과세(소비세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조정), △ 소득재분배 조절 때문임.

□ "12.5"규획 강요에서의 조세제도 개혁

- 제47장 재세체제 개혁 가속화: 각급 정부 간의 재정분배 관계를 재정립하고 공공재정 체계를 건전히 하며, 예산제도와 조세제도를 개선하고 경제성장 방식 전환에 유리한 재정체계를 적극 구축함.
- 제3절 조세제도 개혁과 개선:
  - 조세구조 최적화, 공평과세, 분배관계 정립, 조세징수권 배분 완비 원칙에 따라 조세제도 체계를 건전히 하고 조세법 건설을 강화함.
  - 부가가치세 징수범위를 확대하고 동시에 영업세 징수범위를 축소하며, 소비세 징수범위, 세

율구조와 과세단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 종합과세와 분류과세가 상호 결합된 개인소득세 제도를 점진적으로 건립하고 개인소득세 징수관리 메커니즘을 완벽히 함.
- 행정성 수수료를 세금으로 바꾸는 개혁을 계속하여 추진하고 자원세와 경지점용세 개혁을 전면적으로 추진함.
- 부동산 보유세 개혁을 연구하고 점차 지방세 체계를 완비하며, 성급 정부에 적절한 징수관리 권리를 부여함.

<표1> 2010년 중국 공공 재정수입

(단위: 억 위안)

항목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대비 결산액 비중 (%)	2009년 결산액 대비 결산액 비중(%)
조세수입	65,002.34	73,210.79	112.6	123.0
국내 부가가치세	20,466.67	21,093.48	103.1	114.1
국내 소비세	5,241.00	6,071.55	115.8	127.5
수입상품 부가가치세, 소비세	8,070.00	10,490.64	130.0	135.7
수출상품 부가가치세, 소비세 환급	-7,070.00	-7,327.31	103.6	113.0
영업세	10,040.00	11,157.91	111.1	123.8
기업소득세	12,411.00	12,843.54	103.5	111.3
개인소득세	4,236.67	4,837.27	114.2	122.5
자원세	375.00	417.57	111.4	123.5
도시유지보호건설세	1,710.00	1,887.11	110.4	122.2
부동산보유세	890.00	894.07	100.5	111.2
인지세	961.00	1,040.34	108.3	115.9
이중 증권거래인지세	531.96	544.16	102.3	106.6
도시토지사용세	1,020.00	1,004.01	98.4	109.0
토지 부가가치세	795.00	1,278.29	160.8	177.6
차량선박세	205.00	241.62	117.9	129.5
선박톤세	25.00	26.63	106.5	111.9
차량구입세	1,338.00	1,792.59	134.0	154.0
관세	1,580.00	2,027.83	128.3	136.7

#### 나. 영업세를 부가가치세로 전환

- 현재 상하이에서 교통운송업과 일부 현대 서비스업에 대해 시범 시행중임.

- 현재 대부분의 서비스업은 여전히 영업세가 적용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는 징수범위가 좁음.

□ 영업세는 중복 과세 문제가 있음. 영업세 과세대상인 모든 서비스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경우, 서비스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서비스업에 대한 세율 확정문제를 타당하게 해결해야 함. 부가가치세 세율을 지나치게 높게 설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기존 부가가치세 세율을 적용할 경우 서비스업의 조세부담이 무거워질 것임.

□ 그 외 금융서비스업의 과세문제는 국제적으로 여전히 논쟁이 되는 문제임. 중국 또한 금융서비스업을 부가가치세 징수범위에 포함시키는 것과 관련해서 더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음. 하지만 전반적으로 부가가치세의 범위를 서비스업으로 확장하는 것이 대세임.

□ 교통운송업 등과 같이 상품거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산업을 우선적으로 부가가치세 징수범위에 포함시킬 것인지, 농업과 전자 상거래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또한 난제임.

□ 베이징 등 도시에서도 시범 개혁을 요구하고 있음.

□ 개혁의 어려움은 △세율조율(11%와 6%), △감세, △조세징수관리, △중앙과 지방의 재정관계 등에서 두드러짐.

## 다. 개인소득세제 개혁

□ 개인소득세 개혁은 공공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 2011년 9월부터 월 공제기준을 2,000위안에서 3,500위안으로 인상시키고, 9단계 초과누진세율을 7단계 초과누진세율로 수정하였으며, 중저소득 계층의 가치분소득 인상을 강화하고 고소득계층의 조세부담을 가중시킴.

- 개인소득세가 조세수입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2010년 평균 7% 미만이고 2011년에 6.7% 여서 개인소득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은 제한적임.

- 조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 파급 영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현재가 개인소득세를 규범화하기 좋은 시기이며, 이를 위해 소득분배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들을 찾고 있음.
- 가장 기본적인 소득분배 구조는 1차 소득분배에서 형성됨. 현재 중국은 경제전환기로 정부와 시장 경계 모호함, 독점산업 개혁과 국유자원 보상제도 개혁 낙후 등이 심각한 1차분배의 왜곡을 초래하였음. 이는 중국 소득분배 구조를 왜곡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1차 분배에서 공정성과 효율성을 실현해야 함.

#### □ 개인소득세제 개혁의 중점

- 개인소득세 월급 공제기준, 즉 공제액의 조정은 필연적임. 소득에서 원가비용을 공제한 후의 잔액만이 소득(과세소득)이라 할 수 있음. 공제액은 원가와 비용을 대표함. 물가수준의 인상에 따라 생활원가와 비용은 계속 상승하고 있기에 공제액의 인상도 당연한 것임.
- 특히 공제액과 소비자가격지수가 연동된 조정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양로, 의료, 주택, 교육 등 비중이 큰 지출의 전문 공제제도를 구축하여 민생을 더욱 잘 개선해야 함.
- 45%의 높은 세율은 하향 조정할 여지가 있음.

#### □ 종합소득세 개혁은 징수관리 여건의 제약을 고려해야 함. 소득분배 조정을 목표로 하는 개인소득세는 여러 가지 요인의 제약을 받음.

- 종합소득세는 공정성을 실현하는 비교적 이상적인 조세제도임. 하지만 종합소득세의 실시는 세무 징수관리 기관이 반드시 개인소득 정보를 전면적으로 파악해야 함.
- 현실적으로 보면, 세무기관은 개인의 회색수입 정보를 파악할 수 없고 현금거래의 보편성으로 인해 많은 현금수입을 추적할 수 없음. 종합소득세 실시를 위해 이를 파악할 조세징수관리 기관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세무기관은 주로 기업의 납세수요를 위해 설치되어 있음.

- 개인소득정보의 취득은 정부 여러 부서의 협조가 필요하므로 정부부서 간 정보교환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더욱 많은 부서가 세무부서에 관련 수입정보를 제공하도록 해야 함.
- 이런 환경을 고려하면, 종합소득세를 경솔하게 실시할 경우 수입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수입 정보가 쉽게 파악되는 개인이 더욱 많은 조세를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 단계별 해결책

- 현실적으로 개인소득세 차원에서 소득분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종합소득세가 완비된 전제하에서 단계별로 실시하는 전략을 채택하는 것임.
- 단기 개혁의 중점은 조세 징수관리 기초여건을 완비하고 기존의 결점을 보완하는 것임. 예를 들면 자금세탁 방지법을 엄격히 실시하여 현금거래의 범위를 최대한 축소하고, 세무부서 내부의 개인소득세 정보 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부서간의 정보교환을 통해 세무기관이 다양한 경로를 이용하여 소득정보 수집 여건을 마련하는 것 등이 있음.

#### □ 최저 대체 조세제도 도입

- 부유층이 조세를 회피하는 수단이 많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최저 대체 조세제도 도입을 고려할 수 있음. 예컨대 자산규모를 근거로 하여 부자가 더욱 많은 개인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임.
- 또한 개인소득세가 3차 분배에서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장려해야 함. 예컨대 자선기부 공제에 대해 더욱 편리한 제도를 실시해야 함.

#### □ 개인소득세 자진납부에 대해 적절하게 장려함

- 종합소득세의 경우, 개인의 자진신고 납부를 적극 장려해야 함. 이는 12만 위안 이상 소득의 개인 자진신고 납부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함. 예컨대 연봉 소득을 계산근거로 하여 전년 과세액을 계산하여 월별 세금과 연도별 세금 신고 왜곡을 해소함.

- 또한 자진 납세자에 대해 상응한 장려조치를 취해야 함. 예컨대 납세신고가 특정 조건에 부합될 경우 일정 세금을 환급하거나, 연도별로 세금을 계산한 결과 과세액이 월별로 계산한 과세액보다 낮을 때 차액을 환급하는 것 등이 있음.
- 중국의 개인소득세 실제현황에 따라 연도별로 계산한 과세액은 13개월(매년 1차적으로 발급하는 상여금을 단독 계산하여 포함시킴. 1차적으로 발급하는 상여금이 없을 경우 12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함)에 따라 별도 계산한 과세액의 합계보다 낮아야 함. 그 차액이 바로 자진납세를 장려하는 부분임.

□ 개인소득세 개혁은 실제에 부합해야 함.

- "12.5"기간의 개인소득세 개혁은 실제와 부합하여 소득분배 조절과 거시조정 기능을 더욱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목표를 점진적으로 실현해야 함.

## 라. 부동산 보유세 개혁

□ 부동산 보유세 부과는 2011년 1월 28일 상하이와 충칭에서 시범 시행함.

- 부동산 보유세는 보장성주택 건설을 위해 자금을 제공함.
- 중국은 현재 공업화와 도시화 임무에 직면해 있음. 중국의 주택시장 문제는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배경에서 형성된 것임.
- 투자와 투기수요를 억제하면 자가 주택 수요의 압력을 완화할 수 있음. 하지만 근본적으로 보면, 주택시장은 우선적으로 광범위한 유효한 공급이 필요함. 공급확대는 주택시장이 판매자 시장에서 구매자 시장으로의 전환에 유리함. 구매자 시장에서 주택의 투자와 투기수익이 아주 미미하여 사실상 소비자위주의 주택시장으로 회복될 것임.

□ 판매자시장인 국정을 떠나서는 안 됨.



- 주택의 유효한 공급을 확대한 후 개인의 합리적인 주택소비와 개인부동산수익 조절에 대한 조세의 기능이 실현 가능함.
- 판매자시장에서 판매자 이익에 대한 조세기능은 아주 제한적임. 보유단계의 세금 부재가 객관적으로 주택 투기자의 원가를 낮추었음.
- 이론적으로 직접세는 전가하기 어려울 뿐, 전가할 수 없는 것이 아님. 판매자시장일 경우 판매자는 조세부담을 구매자에게 전가함. 이렇게 되면 조세조절 목표는 실현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구매자의 부담을 가중시켜 정책목표와 어긋나게 될 것임.
- 세계 많은 국가나 지역에서 모두 부동산 보유세를 징수하고 있지만, 금융위기 전까지 대다수 지방은 모두 비교적 오랜 시간의 부동산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을 경과하였음.
- 개인 자가 주택에 대해 부동산 보유세를 징수하면 단기간 내에 부동산가격이 하락하겠지만, 궁극적으로 부동산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임.
- 부동산 보유세를 통해 부동산가격을 낮추는 것은 근본적으로 실현하기 어려움.

□ 개인보유 주택에 대한 부동산 보유세의 징수는 대세임.

- 중국은 새로운 지속 가능한 토지재정 모델을 구축하고 토지판매 수입을 위주로 하는 토지재정 모델에서 벗어나야 함.
- 이를 위해 개인주택에 대해 과세를 해야 함. 하지만 개인주택에 대해 부동산 보유세를 징수한다는 것은 이후 지방재정에 아무런 우려가 없다는 것은 아님.
- 서브프라임 위기 영향을 받아 미국의 많은 지방재정은 곤경에 빠짐. 따라서 부동산 보유세의 징수는 지방재정 리스크를 해소하였다고 할 수 없음.

- 부동산 보유세와 지방재정 리스크 사이의 관계를 적절히 처리해야 함.

□ 중복과세를 고려해야 함.

- 부동산 개발단계에 개인주택은 사실상 이미 대량의 인프라시설, 공공서비스와 연관된 세금과 비용을 부담하였음. 그 범위는 도로, 용수공급, 전기 공급, 가스공급, 환경녹화 등을 포함함.
- 국제적으로 부동산 보유세는 대다수 지방의 공공서비스에 이용됨.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우대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또 다른 측면의 불공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부동산 보유세는 주로 지방세로, 지방정부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세금임. 주의해야 할 점은 부동산 보유세는 동등한 기능이 있는 도시건설세와 조율해야 함.

□ 사회영향 범위가 큼.

- 최근 몇 년간 "고급화한" 주택건물이 적지 않기 때문에 극히 낮은 세율일지라도 주민개인이 부동산 보유세를 지불할 능력이 있는지도 하나의 문제임.
- 대다수 사람들이 1주택에 대해 부동산 보유세를 부과할 것을 건의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느 주택에 대해 부과세하는가 하는 것은 실시 타당성이 부족하고 지역별 불공평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부동산 보유세는 지방의 공공재와 공공서비스를 누리는 원가임. 만약 1주택에 대해 부과세할 경우 많은 사람들은 1주택만 보유하게 될 것이고 부동산 보유세는 형식에 불과하게 될 것임.
- 다주택을 보유하여 그중의 1주택에 대하여서만 부과세할 경우, 어느 주택에 대해 부과세하는가 하는 것도 하나의 문제임. 왜냐하면 매 주택의 부동산 보유세는 모두 대응된 지방의 공공재와 공공서비스에 이용되기 때문임.

- 또한 부동산 보유세 자체도 종가과세이기에 비과세 혹은 우대정책 근거를 수량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또한 다주택의 가치는 꼭 1주택의 가치보다 높다고 할 수 없음. 이런 우대정책을 채택할 경우 새로운 조세 불공평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공평원칙을 고려하면, 일반주택에 대해 부동산 보유세를 징수할 경우 우선 소산권주택에 대해 징수하고 소산권주택에 합법적인 지위를 주며, 최종 모든 주택에 대해 과세하여야 함.

□ 주택민생은 토지의 유효한 공급을 확대해야 함.

- 부동산 보유세를 징수한 후에도 부동산 보유세의 징수와 부동산 보유세의 가격이 정의 관계를 갖기만 하면 지방정부는 여전히 토지가격과 부동산가격을 상승시킬 동력이 있음.
- 시장의 문제는 시장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함.
- 부동산시장 조정은 단기 내 투자수요를 억제하는 동시에 유효한 토지공급을 대규모로 확대하는 것으로 전환해야 함.
- 정부는 대도시의 토지공급을 강화하는 한편, 적극적으로 농지유전제도 개혁을 추진하여 농촌집체 토지가 합법적으로 직접 시장에 유입되어 다양한 주택수요를 만족시키도록 해야 함. 토지공급이 증가되면 경쟁수준이 자연히 상승되어 부동산가격의 안정도 예측할 수 있음. 이것이 바로 부동산시장의 근본적인 해결책임.
- 과거 중국은 많은 상품이 판매자 시장에서 구매자 시장으로 전환되었는데 이는 모두 공급확대의 결과임. 부동산시장 조정도 이러한 경험과 교훈을 흡수해야 할 것임. 이렇게 해야만 주택시장의 비정상적인 상황이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

□ 공공정책 목표와 조세제도 개혁

- 에너지절약과 배출감소, 소득분배 명의로 진행되는 조세제도 개혁을 특별히 주의해야 할 것임.

## <질의응답 >

### 질문 1.

영업세를 부가가치세로 전환함에 있어서 감세부분을 지방정부가 부담하지만 감세효과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성급 도시를 기준으로 이런 세제개혁 조건을 가진 도시는 몇 개 정도인가? 보편적인 세제개혁으로 추진 가능한가?

보장성주택에 대해 지방정부, 중앙정부, 개발업체 사이에 이해를 달리 하고 있다는 보도를 본 적 있음. 이로 인해 보장성주택의 원활한 확보가 어렵고 궁극적으로 부실 초래 등 우려도 있음. 최근에 발표한 지방의 채권수입을 우선적으로 보장성주택에 투입하고자 하는 취지, 배경 및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2011년 말 경제공작회의를 비롯해 올해 경제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사람이 많은데 특히 재정상황에 있어 구조적 감세, 민생지출 확대 등 추진 중에 있는데 외부적으로 중국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경우 중국경기를 되받쳐 주는 재정수단은 어떤 것이 있는가? 소비촉진 보조금을 제공할 가능성은 있는가?

### 답변 1.

영업세를 부가가치세로 전환시키는 세제개혁 추진 여건을 구비한 성급 도시가 몇 개인지 판단하기 어려움. 현재 베이징의 경우 이미 세제개혁 추진 계획을 공개하였음. 감세 폭이 지나치게 크지 않기 때문에 베이징 이외 저장, 장쑤 등 많은 지방에서 모두 세제개혁 여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음. 또한 이런 세제개혁에 따른 경제성장 효과도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세제개혁 압력은 크지 않다고 봄.

사실상 당초 "12.5"기간 3600만 채의 보장성주택 목표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많았음. 최근 리커창(李克強) 부총리는 보장성 주택 분배에 대해 언급한 적 있음. 이는 중국의 국유기업 문제와 비슷한 점이 있음. 예컨대 1990년대 80년대 말~90년대 초에는 국유기업의 결손이 논의 대상이었지만, 지금은 국유기업의 배당금 배분이 논의 대상으로 된 것임. 즉 자금이 많아도 고민이 있는 것임. 만약 지방정부의 자금이 부족할 경우 보장성주택을 건설하지 못할 것임. 하지만 지방정부 관원 임

명은 중앙정부에서 결정하기에 지방정부 관원은 꼭 모든 방법을 통해 3600만 채의 보장성주택 건설을 완성할 것임. 지방정부의 재정수입과 토지소득으로 보장성주택 건설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중앙정부에서 차관 혹은 무료로 자금을 제공할 것임. 이런 문제는 구체적인 운영과정에서 해결되는 것임. 현재 충청의 보장성주택 혜택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경우 보장성 주택이 그 의미를 잃게 될 것임. 향후 전국적 범위에서 이런 유사한 문제가 나타날지 여부는 지금 예측하기 어려움. 현재 우선 보장성 주택을 건설하고, 향후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다시 대책을 세워야 함. 개발업체는 우선 자금을 확보해야 보장성 주택을 건설할 수 있지만, 최근 많은 개발업체가 자금난을 겪고 있음. 베이징의 경우, 최근 신축 상품성 주택 주변에 의무적으로 보장성 주택을 건설해야 함을 규정하였음. 이 또한 중앙정부에서 확정한 목표를 완성하기 위한 일종 조치라고 할 수 있음. 하지만 공공서비스 수요, 아파트 관리 등에 대한 수요가 다름에 따라 이런 조치는 새로운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음. 즉 보장성 주택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이로 인해 새로운 사회문제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음.

현재 재정이 계속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될 경우, 중국의 재정에는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임.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전략적 신흥 산업은 하루 이틀 사이에 신속한 발전을 가져올 수 없음. 따라서 현재는 물론 향후 한동안 여전히 전통산업이 중국경제를 뒷받쳐 줄 것임. 현재 적극 추진 중에 있는 서비스업도 관련 제조업을 떠나서는 발전할 수 없음.

소비 촉진과 관련해서 중국정부는 이미 자동차, 가전제품 등과 관련된 많은 보조금 조치를 취하였음. 해당 조치를 통해 많은 소비자와 기업이 혜택을 얻게 되었음. 하지만 이런 정책적 효과에 대한 의견은 각이하고 만약 동 자금을 다른 분야에 투입하였다면 더 좋은 효과를 이루었을지도 모른다는 의견도 있음. 소비를 촉진시키는 새로운 정책으로는 최근 베이징에서 추진한 가구 "이구환신(以旧换新)" 정책이 있음.

하지만 소비를 촉진시키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소득 인상을 통해 주민의 가처분 소득을 향상시키는 것임. 가처분 소득이 인상될 경우 소비도 자연스럽게 촉진될 것임. 또한 정부의 공공서비스 수준 제고를 통해 가처분소득을 인상시킬 수 있음. 예컨대 베이징의 경우 한 가정의 지출에서 교육지출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함. 비록 9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하지만 유치원, 학원 등 기타 교육비용이 상당히 많음. 그 외 독점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개방시키는 것도 중요함. 개인적으로는 소

비 촉진에 있어 정부의 보조금 제공보다는 공공서비스 개선 등 방법을 더욱 선호함.

## 질문 2.

중국의 연간 재정수입이 10조 4천억 위안 정도인데 지방정부 채무 잔액이 무려 10조 7천억 위안 임. 이런 시각에서 보면 지방정부 채무가 큰 문제로 나타나는데 지방정부가 직접 부담해야 할 비중이 50%, 보증 부분까지 합쳐 70%로, 정부가 부담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언론이 많음. 하지만 글로벌 시각에서 보면 사실 지방정부에서 담보 선 페이퍼 컴퍼니 (paper company)의 경우 이미 1/3이 부실화 되어 지방정부 채무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예측 됨. 지금 중국에서는 한결같이 문제없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글로벌과 중국의 시각 차이는 무엇인가?

## 답변 2.

지방채무로 인해 체계적인 리스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정부에서 경제조정 수단을 남용하지 않는 등 전제조건이 있음.

물론 일부 지방과 산업에서 피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이는 국부 문제임. 지금 중국에서 한결같이 지방채가 전혀 문제없다는 것은 전국 차원에서 볼 때 지방채 규모가 문제 없다는 것임. 하지만 상환기간에 문제가 있음. 2011년 은행감독관리위원회 주석은 지방채무 상환 기간을 연장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였는데 그때 많은 사람의 우려를 자아냈음. 하지만 최근 중국정부는 지방채 상환기간 연장 허락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좋은 소식임.

중국경제는 자체만의 독특한 운영논리가 있음. 예를 들면 중국의 부동산가격은 이미 장시간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는데 이는 주로 부동산시장은 수요가 공급을 훨씬 초월하였기 때문임. 물론 중저소득층의 소득수준으로 부동산가격을 기능하면 중국의 부동산문제가 심각함. 저장성 원저우의 부동산가격은 1평방미터당 3~4만 위안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정상적인 수준이라고 생각함. 부동산시장 조정은 지방정부의 재정과 관련될 뿐 정상적인 운영상황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 1998년 이래 중국 경제 발전을 뒷받침해온 것은 부동산, 자동차, 도로건설이었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삼자의 균형을 유지하고 새로운 경제성장 방법을 모색하는 것임.

또한 국유자원, 국유자산을 감안할 경우 지방채는 더욱 문제없음. 중국정부가 왜곡된 정책을 실시하지 않는 이상 지방채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며, 윈난성과 같은 일부 지역에서 문제가 나타났다 할지라도 중앙정부에서 쉽게 지원할 수 있는 것임.